출장보고서

▌출장목적: OECD EPC 회의 참석

▌출장기간: 2017년 11월 5일~10일

▌출 장 지: 프랑스 파리

▌출 장 자: 김현욱(KDI)

▌Round 1. Global economic outlook, resilience and policy requirements(세계경제 전망, 회복세와 정책 요구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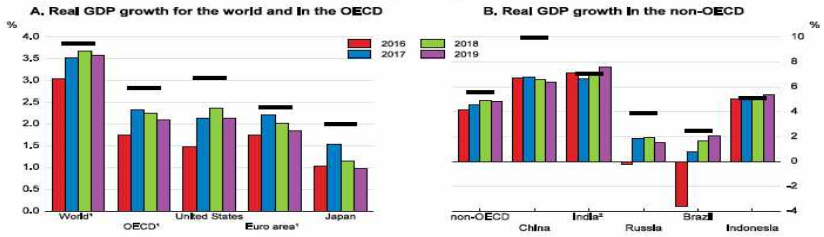
< OECD 발표내용 >

□ 최근 경제상황

○ 세계경제는 '1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**성장**하는 중이며, **산업생산, 국제교역, 투자** 등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**회복세**

- **선진국**은 **내수**를 중심으로 성장세이며, **신흥국**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**자원 수출국**을 중심으로 완만한 **회복세**

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



- 또한, 선진국·신흥국 모두 **소비자** 및 **기업 심리지수**가 모두 **호조세**를 보이며, 투자 등 내수 부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

○ 다만, 주요국 **통화정책 정상화**, **中 부채문제 및 과잉설비 구조조정**, **글로벌 밸류 체인 약화** 등은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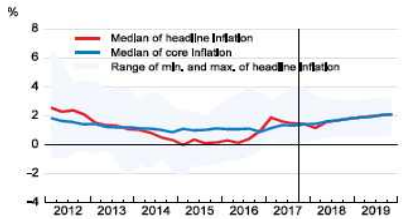
○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**생산성 증가**와 **투자의 견고한 회복**이 필수적 → **구조개혁**을 통한 경제 여건 개선 필요

□ 주요 부문별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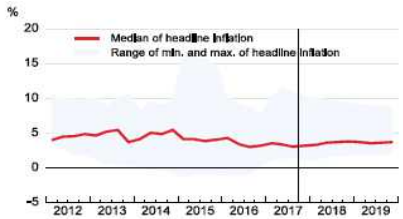
○ (**물가**)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 주요 **선진국 및 신흥국**의 소비자 물가가 **완만한 수준**으로 유지 중

- 이러한 물가 안정세는 **기술적 진보**에 의한 기여도 있는데 주요국에서 나타는 **통신비의 감소 추세**가 이를 보여줌

주요 선진국 인플레이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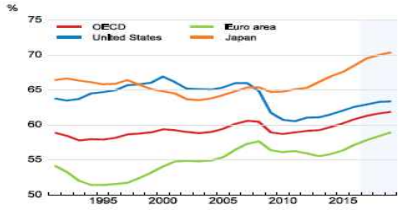
신흥국 인플레이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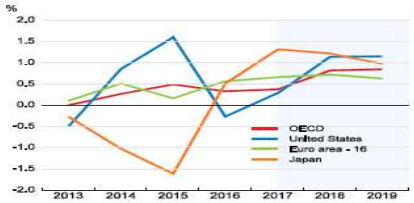
○ (**노동시장**) 주요국을 중심으로 **고용여건이 개선**되고 있으나 **임금상승 정체**, **비정규직 비율이 상승***하는 등 그 결과는 여전히 불공평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

* 금융위기 이전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1%P 넘게 높은 상황(OECD 국가)

고용률



실질임금 상승률



○ (**금융시장**) 여전히 완화적 금융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, **통화정책 정상화** 등으로 인한 **리스크 상존**

ⅰ) (**채권시장**) 장기 정부채 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,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 존재

ⅱ) (**주식시장**)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회복과 법인의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주식가격 상승 중. 다만, 주가수익비율(PER)이 높은 상황이기에 과대평가로 인한 조정가능성 존재

□ **정책 권고**

○ **시장 상황에 근거한 통화정책 실시**

- **통화정책 정상화**는 **금융시장의 반응**과 **물가** 상황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

- 각 **국가별 상황을 고려**하여 **기준 금리 인상**, **자산 매입 축소**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

- 특히, 주요 신흥국 중 **브라질·러시아** 등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하나, **중국**의 경우 누적되고 있는 기업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 축소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

○ **잠재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구조개혁**

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공급측면의 일관성 있는 **구조개혁 패키지**가 요구 됨

- 이를 위해 시장 장벽을 낮춰 **경쟁을 강화**하고, **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조치 병행**이 필요

- 그러나, 현재까지 노동시장과 제조시장을 동시에 개혁하는 구조개혁 패키지는 제한적인 상황 → **구조개혁 패키지** 실현 필요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큰 경제위기 이후에는 다섯 가지의 변화가 발생하며, 현재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**지속성**이 중요(의장)

* ①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, ②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대출 하락, ③ 부와 소비가 감소하며 저축을 상승, ④ 부동산 시장 붕괴, ⑤ 장기 실업률 상승

□ 각국 대표들은 **세계경제**가 **회복세**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, **구조개혁** 및 **글로벌 무역**관련 이슈 등을 제기

○ 주요국 경제는 투자 회복, 글로벌 무역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 되고 있는데, 이러한 시점에 **중장기 성장**을 위한 **구조 개혁**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(영국)

○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특히 중요. 또한, **보호무역주의 대두를 경계**할 필요(EU)

○ 성장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**무역개방성**이라고 언급하며 **자유무역 기조**가 필요함을 주장(이탈리아)

○ 구조개혁 문제도 중요하지만 **글로벌 불균형**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(미국)

□ 한편,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(일본)

○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**인구 고령화**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기 이전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

□ 아울러, 세계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는 **리스크 요인**이 상존함을 지적하며 **하방요인**에 대한 경계도 필요함을 언급(프랑스)

* ① 확장적 통화정책, 재정정책 등으로 성장이 뒷받침, ② 실질임금이 성장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, ③ 투자는 여전이 상대적으로 미약

Round 2-1. Regional rounds(United States) (미국경제 상황과 전망)

< OECD 발표내용 >

(경제상황)

□ 미국 경제는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금년 들어 성장세가 확대

○ 민간소비는 자산가격 상승 및 소득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

○ 투자도 심리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최근 반등

□ 고용은 실업률 하락,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으로 호조 지속

○ 다만, 임금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(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)는 향후 노동공급 및 소비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소지

(정책여건)

□ 통화정책의 경우 연준은 그간 수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

○ 고용여건의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완화적 기조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
○ 빠른 정책금리 인상은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, 저금리 기조 지속은 금융왜곡(financial distortion)을 증폭시킬 수 있음

□ 재정지출은 소득세,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감안할 때 점차 확장적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세율인하로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재정적자는 2017~2019년중 GDP대비 0.5%p 확대될 것으로 추정

(경제전망)

□ 미국 경제는 소비호조 및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2018~2019 년중 2.0~2.5%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

○ 고용호조에 따른 임금상승세 확대는 소득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세제개편으로 기업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통화정책은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으로 인해 완화적 기조의 축소 지속 전망

□ 다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잠재

○ 재정지출확대의 시행시기와 규모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

○ 예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의 긴축속도가 빨라질 가능성

○ 미국과 주요국간 금리격차 확대로 국가간 자본이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소지

미국 주요 경제지표

	2015	2016	2017	2018e)	2019e)
GDP(%)	2.9	1.5	2.1	2.4	2.1
실업률(%)	5.3	4.9	4.4	4.0	3.7
정부부채(GDP대비 %)	105.0	106.9	105.4	106.9	108.3
경상수지(GDP대비 %)	-2.4	-2.4	-2.6	-3.0	-3.2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(**미국측 브리핑**) 미국 경제는 허리케인 이후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회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

○ **파트타임 직업**은 **감소**하고 있으며 연준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. 또한, **인플레이션**도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**하회**

○ **이자율과 가계부채**는 모두 **낮은 상황**을 유지하고 있으며, 금융시스템 전반의 **레버리지도 축소**

○ **고용률**은 예상치보다 **낮으며**, **노동시장참가율**도 역사적으로는 매우 **낮은 수준**. **명목임금** 상승률도 위기 이전에 비해 현격히 **낮은 상황**.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임금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우려 존재

○ **세금 및 규제개혁**과 관련해서는 기업 이익과 임금 상승률 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보이며,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

- 또한,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무역적자가 2배로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도 존재

□ 미국 생산성의 경우 위기와 상관없이 하락 추세. 실업률이 갑자기 낮아지면 싼 노동력 덕분에 기업들이 기술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악화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음(브라질)

□ 미국의 **부동산 가격**은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수준인데 현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(일본)

▌Round 2-2. Regional rounds(China)(중국경제 상황과 전망)

< OECD 발표내용 >

(경제상황)

□ **중국경제**는 **성장세**가 **다소 강화**

○ **소비**가 실질소득 증가 및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**견조한 증가세**를 지속하고 **수출도**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서 **확대**

○ 생산자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기업이익이 회복되는 가운데 **투자도 인프라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**

- **다만** 과잉설비 감축 필요성,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**투자 증가세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**

(정책여건)

□ **통화정책**은 **긴축기조**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**금융안정**이 정책당국의 **주요 목표**가 될 전망

○ 그림자금융 및 은행간 자금시장 규제 강화로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**긴축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**

- 기업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

○ 자본유출입 규제, 새로운 환율산정제도 도입 및 단기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**위안화 환율 절하 추세가 멈추고 외환보유고가 다시 증가**

□ **재정정책은** 연초에 비해 강도가 낮아졌지만 **확장 기조**를 지속

○ 한편, 중국 정부는 불법적인 지방정부 부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

○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이 암묵적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의 불법적인 정부자금 유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

○ 따라서 **공공투자의 확대**는 **자본배분의 비효율성**을 **심화**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**가능성**

(경제전망)

□ 중국 경제는 해외수요 및 인프라투자 증가에 힘입어 **금년중 6.8%의 성장률**을 달성하고 2018~19년에는 금년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○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**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고** 감세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용창출에 힘입어 **소비도 꾸준히 증가**할 것으로 예상

○ 주택거래 및 모기지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**주택가격은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**

○ 다만 은행간 자금거래 규제 강화로 인해 **중소형 은행이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** 더딘 기업부문의 **디레버리징**은 장기적으로 **더 커다란 문제**를 **초래**할 수 있음

중국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대비, %)

	2015	2016	2017	2018e)	2019e)
GDP	6.9	6.7	6.8	6.6	6.4
소비자물가	1.5	2.1	1.4	1.7	2.0
경상수지1)	2.8	1.7	1.7	2.1	2.2

주: 1) GDP 대비 %

□ **정책 권고**

① **통화정책의 점진적 축소**

- 최근 **국가별 통화정책 기조**의 **차별화*** 가 나타가고 있으며, **상이한 경제여건**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**향후 18개월 이상 지속** 가능

* (美) '16.12월, '17.3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(총 50bp인상)
(EU) 자산매입규모 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축소('17.4월~)
(日)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

- **주택가격**과 **가계대출**이 **빠르게 증가한 국가**들은 **금융기관**의 **건전성**을 **향상**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

- 또한, **통화완화 정책의 축소**와 **정책조합의 재조정**은 금융시장의 취약성 해결에 긍정적이며, **주택 공급을 촉진**하는 **정책**도 **병행**할 필요

② **재정정책의 강화**

- 각국이 과거보다 **적극적인 재정정책**을 펼치고 있으나, **높은 재정수입**, 저금리에 따른 **이자비용 감소** 등을 고려할 때, 주요국의 **재정여력**은 **충분**한 상황

- **통화완화 정책**을 **점진적으로 축소**해 가는 과정에서 **잠재성장률**을 **제고**하고 **민간 수요**를 지속적으로 **창출**하기

위해서는 **효율적인 재정정책** 및 **구조개혁** 활용이 필수적

- 재정정책의 **국제 공조**시 **효과가 강화**될 것으로 분석

③ **구조개혁 패키지화**는 **강력하고 포괄적인 성장**을 위해 **필수적**

- 최근 **개혁 진행 속도가 둔화**되는 등 **구조개혁이 지연**

- **구조개혁의 패키지화**는 구조개혁의 **경제적 영향**을 **강화**하고, **효과가 공유**되도록 함으로써 **전반적인 효율성 향상 가능**

- **진입장벽의 축소**는 **혁신과 역동성을 증진**할 수 있으나, **저소득층의 고용**에는 **악영향** → **근로자의 전직** 등을 **지원**할 필요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(**중국 브리핑**) 성장 모멘텀은 더 강해졌으며, 소비·투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, 고용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

① **통화정책**의 경우 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, 디레버리징과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집중할 예정

② **재정정책**은 선제적으로 운영할 것이며, 올해는 GDP 대비 3% 적자를 보일 예상. 또한 세금을 줄여서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집중할 것 계획

- **소비**가 특히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, 서비스 부문의 경제 기여도가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- **거시건전성 감독**을 강화할 계획이며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

□ **투자** 부문을 살펴보면 인프라 쪽은 강한데 **제조업 투자는 감소**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(일본)

□ 한편, **한국 대표단**은 공공부문 투자와 부동산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에, **구조개혁**이 병행되지 않으면 **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**

○ 특히, 부동산 관련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**부동산 경기**가 침체되는 경우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

▌Round 2-3. 유로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
(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Euro Erea)

< OECD 발표내용 >

[2017-18 경제 현황]

□ **유로경제**는 **내수**와 **수출**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으며, **고용**여건 및 **심리**지수의 개선 추세도 지속

○ **소비와 투자** 등 대부분의 **실물지표**와 **경기체감지수** 등 주요 심리지표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

○ **상품수출과 수입**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대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,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○ **임금 상승률**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,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고용 여건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.

○ **물가 상승률**은 2017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19년 말까지 2%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[2018 경제 전망]

□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완만한 통화긴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

○ 유로존 경제는 점진적인 통화긴축이 예상되고, 주요 실물 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는 2%, 2019년에는 1.8%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[정책 방향]

□ 경쟁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, 신기술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

○ 각국은 고용 친화적인 재정 개혁을 실행하고 잠재적 성장을 촉진하는 항목으로 지출 구성을 전환해야 할 필요

□ 이탈리아 및 유로존 주요 국가의 금융 기관 부실 우려 등의 위험 요인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

○ 유로 지역 은행 부문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 예금 보험 제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은행 연합을 완성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중요

□ 개인 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의해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○ 높은 개인 부채로 인해 부실 채권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 대출이 억제될 수 가능성

○ 따라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 은행 간 연계를 줄이고 유럽 차원에서 보다 많은 위험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음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(**EU 브리핑**) 4분기 연속 양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소비·투자 모두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. 이는,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인

○ 다만, 이를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에는 어려움

- 일자리는 창출되고 있으나 임금은 그만큼 상승하지 않음

- 설비투자는 강하게 회복하고 있으며, 건설투자도 반등하고 있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

-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GDP 대비 90% 수준이나 명목성장으로 인해 점점 낮아질 것이며, 민간부채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

- 외부적 리스크로는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, 내부적으로도 브렉시트 등의 리스크가 존재

□ 독일의 금융시장 개혁, 이태리의 부실채권문제, 프랑스 마크롱의 개혁,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설명 요청(미국)

○ (독일 답변) 리스크 감소와 리스크 쉐어링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금융시장 안정화 추진 중

○ (이태리 답변) 정부는 은행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보유, 자본확충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예정

- 다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할 계획

○ (프랑스 답변) 기업단위의 노사합의를 도입하고, 해고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중이며, 법인세율을 20년 22%로

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비용은 줄여줄 예정

○ (영국 답변) 영국은 EU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결과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음

▌Round 2-4. 일본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(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Japan)

< OECD 발표내용 >

[2017-18 일본경제 전망]

□ 올해 **일본**의 경제성장률은 **대외수요 및 재정지출** 확대로 1.5%를 기록하고, 2018년에는 재정 건전화가 시작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**수출** 호조세 지속으로 **1%**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전망

○ **고용**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며, 임금의 점진적 상승세가 지속될 것임.

○ 고용시장의 호조세는 민간소비 증가를 견인하겠지만, 2019년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파급경로상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

○ 다른 아시아 국가의 수요 확대는 일본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,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는 2018년 물가를 1%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됨.

○ 다만,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**지정학적 긴장**과 **보호무역주의,** 대내적으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**공공부채**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지적됨.

[정책방향]

□ **일본은행**은 물가목표인 2%에 도달할 때까지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함.

○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목표수준인 2%를 상회할 때까지 본원통화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

□ 또한, **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**와 **성별 간 임금격차** 해소 등의 노동정책이 필요

○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강화와 직업교육 등이 요구됨.

○ 또한, 양육시설 확대, 근로시간 감축 등을 통해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임.

-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남녀임금 격차(27% 수준) 해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.

□ 그 밖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, 부실기업 퇴출, 소규모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의 구조 개혁도 중요함.

[높은 수준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화 노력]

□ GDP대비 220%를 상회하는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,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요인으로 지적됨.

○ 재정지출 확대는 2016-17년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했으나,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2017년 GDP 대비 2.5%에 이르게 됨.

○ 일본 국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 채무 부담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상황이나,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은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.

○ 추가 경정예산의 집행효과 감소로 2018년 재정건전화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, 2018 회계연도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목표치인

1%를 상회하는 GDP 대비 2.4%를 기록할 전망

○ 2019년 10월부터 **소비세 인상**(8%→10%)이 시작될 예정이지만, 2020 회계연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(**일본 브리핑**)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중이며,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인구는 185만명 증가. 또한, 기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도 증가추세

○ 또한, 성장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

-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IT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**4차 산업혁명**에 대비 중

- **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**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여러 **노동시장 유연화** 정책도 추진 중

- 美 연준이나 ECB와 같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,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

□ **기업 이익**이 매우 높고 저축도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, **FDI 촉진**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음(프랑스)

□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도 동시에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?(미국)

○ (**일본 답변**) **재정 안전화와 경기 부양**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. 또한, 금융위기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

니라면 19년에는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

- 특히, 사회복지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**재정 건전성**을 확보할 것

▌Round 2-5. 신흥국 전망과 정책 이슈 (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Emerging market)

< OECD 발표내용 >

□ 아르헨티나

○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, 아르헨티나 경제는 환율이 하락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물가상승률도 낮아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음

○ IMF에서도 소비와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민간투자와 수출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

□ 브라질

○ 브라질 경제도 금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나,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개선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다수의 기관들이 평가

○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나 물가와 금리가 낮아져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도 회복될 것으로 판단

○ 특히, 10%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이 3%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이자비용 감소로 이어져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

□ 멕시코

○ 멕시코는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재정건전화 및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
○ 구매력 감소와 신용 증가율 둔화로 민간소비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최근의 구조개혁과 에너지 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

○ 인플레이션 우려로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,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경우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

○ 한편, 멕시코 경제는 NAFTA 재협상 문제, 중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,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

□ 러시아

○ 러시아는 금융시장 개선과 유가안정으로 투자와 소비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○ 그러나 생산성 저하, 노동력 감소, 통화가치 상승, 경제제재 등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으며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

○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대응여력이 존재하고, 재정긴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특히 새로운 재정규칙은 유가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2017년 이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전망이며, 이는 루블화 가치 상승, 부진한 수요 등에 주로 기인

○ 한편, 하방위험요인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유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음

○ 이와 함께 유가 하락은 환율과 자본유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음

□ **터키**

○ 터키 경제는 재정적 지원과 수출 회복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

○ 다만, 2018년 경기부양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, 유럽연합과의 관세 동맹 협정의 갱신도 필요한 상황

○ 한편, 경상수지 적자 지속, 기업부채 증가, 은행의 비 예금 자금 의존성 증가 등 하방위험은 여전히 상존

□ **체코**

○ 체코는 임금인상과 저금리가 각각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확대시키면서 2019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○ 다만,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 임금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체코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과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

○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한 상황

□ **헝가리**

○ 헝가리 경제도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○ 그러나 물가 상승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경우, 수출 회복을 제한할 수 있음

□ **아이슬란드**

○ 아이슬란드는 노동자 이민과 임금 상승으로 2018년에 가계소비가 증가하겠지만, 이후 다시 큰 폭으로 둔화되어 성장률도 하락할 전망

○ 기업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외부 충격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

○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과 관광산업이 개선될 수 있으나, 인플레이션 압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□ **인도**

○ 인도는 단일부가세(GST) 도입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으나, 장기적으로는 단일시장 창출과 자본비용 감소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

○ 아울러 대외부채가 낮게 유지되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기초경제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

○ 다만,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보건 및 교육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편

□ **인도네시아**

○ 인도네시아 경제는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가 확대되고 정책당국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공공투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내수 주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
○ 인플레이션 압력 하락과 환율 안정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었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

환경이 유지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○ GDP 대비 은행의 대출 비중이 낮은 편이나, 기업의 외화 부채 비중이 높아 대외여건이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

□ **남아프리카공화국**

○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증가로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○ 특히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도 안정됨에 따라 민간소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○ 2017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등 외부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이 급변할 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(**아르헨티나 브리핑**) 투자에 힘입어서 경기 회복을 하고 있으며, 인플레이션의 경우 20% 수준으로 아직 높지만 향후 10%대로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

- 향후 전략으로는 ①거시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, ②경쟁을 촉진하며, ③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④기업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부유한 개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계획

○ (**브라질 브리핑**) 브라질은 15~16년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은 이후 경제정책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었으며, 특히,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집중하였고 3%대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노력

- **구조개혁**의 경우 **공공부문 부채**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, **은퇴연령을 연장**시켜 젊은 계층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킴
- 또한, 기업과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**노동시장을 유연화** 했으며, **숙련노동자**의 유입을 촉진 중

○ (**남아프리카 브리핑**) 가뭄이 해소되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, 가계의 디레버리징도 진행 중

- **정부 이자지출은 증가**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**재정건전성은 악화**되고 있는 상황

- 향후에는 **재정건전성**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**금융분야 규제개혁, 경쟁촉진** 등을 추진하고, **정책의 일관성**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

Round 3. Inclusive growth (포용적 성장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□ IG Initiative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**포용적 성장을 위한 틀**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

□ **포용적 성장**을 위한 **프레임 워크**(framework) 구축을 위하여 **4가지 축**을 주된 구성요소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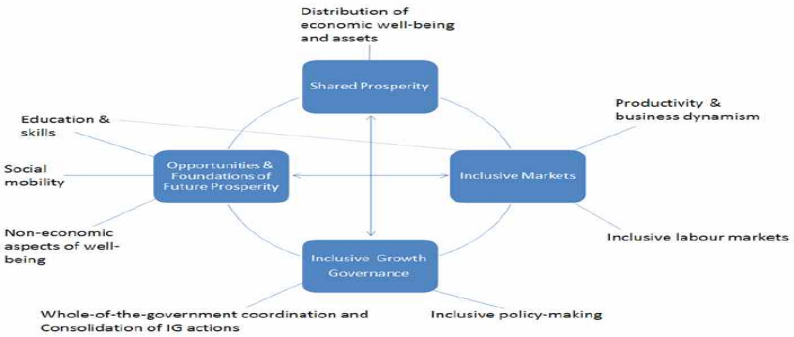
① **shared prosperity** : 경제 성장이 실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며, 이는 부의 분배 등으로 구성됨

② **Inclusive markets** : 경제 구조와 기능과 시장 상황을 평가. 이는 생산성, 기업의 역동성 등으로 구성됨

③ **Equal opportunities and Foundations of future prosperity** : 건강, 교육, 사회적 관계 기술, 환경의 질 등 비물질적 요소로 구성

④ **Inclusive growth governance** : 정부 전체의 조정 및 시민의 관점을 포함한 포용적 정책 결정 등으로 구성

포용적 성장을 위한 4가지 축

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본 연구의 **지표 설정**과 관련하여 각국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

○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판단되나, **투자와 금융**과 관련된 지표들이 없는 것이 아쉬움(독일)

○ **사회적 대화** 관련 지표들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(벨기에)

○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사용해야하며, 각 지수의 **정책적 의미**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음(프랑스)

○ **환경**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, **거버넌스** 관련 부분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 외에 민주주의 및 투명성 등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로 보임(캐나다)

○ **인구구조**의 변화가 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인구구조적인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 또한 포용적 성장인 만큼 포용 뿐 아니라 '성장'측면에 대해서도 관심 필요(덴마크)

○ **인구고령화**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명, 노년 노동참가율 등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**지표들간의 상관관계**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할 필요(일본)

○ 여성, 장애인, 이민자와 같은 **취약자에 대한 포용성**이 현재의 지표들로 충분히 반영되는지 검토할 필요(노르웨이)

□ **사무국**은 대부분 타당한 조언이나,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○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분배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포용적 성장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

Round 4. Progress and calibration of structure reforms (구조개혁의 진행상황 및 그 효과의 측정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[구조개혁의 진행상황 점검]

□ **선진국과 신흥국** 모두 **구조개혁 속도가 점차 둔화**되는 추세

○ **OECD 구조개혁 반응지수***(Reform Responsive Indicator, RRI) 분석 결과, **구조개혁 추진 속도**는 '11~'12년 이후 **전반적으로 하락**

* OECD 구조개혁 정책권고 중 실제로 이행된 정책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수,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속도를 살피기 위해 OECD에서 자체개발

○ '17년 OECD **구조개혁 권고사항도 절반 이상이 未추진**

* '17년 OECD 구조개혁 정책제안 이행실적(%)
선진국 : (完)11 (이행중)33 **(진전없음)56** / 신흥국 : (完)8 (이행중)25 **(진전없음)67**

○ 다만, **'17년에 추진된 구조개혁** 중 **1/3이상이 핵심적 개혁 (Major step)**이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

* 예 : (그리스)전국가적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(이탈리아)빈곤퇴치 프로그램 도입
(프랑스)노동시장 개혁 (일본)'22년까지 영유아 보육센터 수용규모 32만명 확대

□ **부문별**로 살펴보면,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들도 일부 있으나, **상당수 과제**들은 **진행률이 30% 이하**

[참고] 부문별 주요 구조개혁 정책과제

- **[기술부문, Skills]** 기술 및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
  → **초중등 교육 강화, 직업훈련 확대, R&D 효율화 등**
- **[기업부문, Firms]** 기업 활동의 역동성 및 지식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
  → **규제개혁, 세금구조 개편, 무역·투자장벽 완화, 인프라·제도 개선**
- **[노동부문, Workers]** 사회적 통합과 노동시장 효율화를 위한 개혁
  → **여성 노동시장참가율 제고, 사회안전망 확충, 노동자 건강관리, 최저임금 등**

○ (기술부문) **혁신역량을 제고**하기 위해서는 **전반적 교육수준**을 높여 **숙련된 인력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**해주는 것이 중요

- **R&D 효율화 정책**은 비교적 **차질 없이 추진** 중이나, **초중등 교육 정책**은 하나의 과제도 **완벽히 추진되지 못한 상황**

○ (기업부문) **생산성**을 높이기 위해서는 **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**을 통해 **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확산**되도록 유도할 필요

- **기본 인프라**(교통 네트워크 등) **및 법·제도적 여건 개선**을 중심으로 **추진 중**이나, **무역·투자 장벽 완화는 미흡**

○ (노동부문) **사회통합**을 위해서는 여성, 청년 등 **취약계층 고용을 제고**하여 **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**하는 정책이 필수적

- **사회안전망 확충 및 근로자 건강관리는** 원활히 추진 중이나, **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주거안정화 정책**은 **강화할 필요**

⇨ **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**하기 위해서는 **세 부문을 상호보완적 관점**에서 **통합적으로 추진**하는 것이 핵심

* 예 : 기업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(진입장벽 완화 등) 추진 시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

□ **우리나라**의 경우 **기업부문 구조개혁 이행실적은 미흡**한 반면, **노동부문에서는 일부 성과**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

* 우리나라에 대한 '17년 구조개혁 권고사항 중 기술부문 권고사항은 없음

○ **기업부문 '17년 구조개혁 권고사항*** 중에서는 지금까지 **이행한 정책이 全無** 한 것으로 분석

* ①규제영향평가제 강화 및 포지티브 규제 축소, ②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, ③무역·투자장벽 완화 ④부가가치세, 재산세, 환경세 등 인상

○ **노동부문 '17년 권고사항*** 중에서는 **출산·육아휴직 장려 및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 추진**하였다고 언급

* ①보육의 질 제고, **②출산·육아휴직 장려 ③최저임금 인상** ④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합리화 ⑤비정규직 직업훈련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

[구조개혁 효과의 측정]

□ (분석방법) **구조개혁 성과의 계량화 방법**에 관해 지난 4번의 WP1에서 논의된 **다양한 결과를 방법론 위주로 종합**

○ **OECD와 非OECD 그룹 간의 성과 차이를 3개의 공급측 요인*으로 구분하고, 선형·비선형모형을 모두 적용**

* 총요소생산성(Multi Factor Productivity, MFP), 자본심화도, 고용

○ **추정치의 불확실성**과 **국가별 이질성**도 고려하여 효과 추정

□ (분석결과) **정책효과**는 **非OECD국가에서 더 큰 것**으로 추정

○ 특히, **상품시장규제**(PMR) **완화**에 따른 **MFP 제고효과**는 **OECD와 非OECD 그룹간 상당히 큰 차이**가 나는 것으로 분석

* 상품시장규제(PMR) 완화에 따른 장기적 MFP 개선효과(OECD/非OECD) : (규제전반) 17.4%/40.4% (진입규제) 1.5%/24.5% (무역·투자장벽) 15.8%/53.1%

○ 아울러, **무역개방·R&D·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등**은 **MFP 증가에 긍정적**이나 **노동시장 규제**는 **부정적**인 영향

□ (추정결과의 불확실성)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**각 추정치의 표준오차**와 **모형 자체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**하여 계산

○ **MFP**에 대한 **무역개방의 효과**는 **0~5% 사이로 불확실**성이 크게 나타났으나 **적극적 노동정책 지출**은 **1~2%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**

○ **자본축적**에 대한 **법인세의 효과는 0.4~1.6%**로 **불확실**하나, **노동시장 규제개선**의 효과는 **0.3~0.5%로 매우 안정적**

○ **고용**에 대한 효과는 **상품 및 노동시장 규제개선,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등** 대부분 정책변수의 **불확실성이 작은 것**으로 추정

* 전반적 조세격차(Tax wedge overall)의 경우 효과가 0~2% 사이로 상대적으로 불확실
<註> 조세격차 : 총 인건비 대비 세금사회보장비의 비중, 실질적 조세부담을 의미

□ (이질성) **생산함수 파라미터를 국가에 맞게 조정**하여 **경제효과 확인**가능, **그룹별 샘플링**을 통해 **그룹 간 이질성도 비교**가능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**각국 대표**들은 최근의 **경기 회복세를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**하기 위해서는 **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**

○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**목표·우선순위 등을** 명확히 해야 하며, **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**가 있음을 강조(이탈리아),

- 또한, **OECD 보고서의 내용 및 EPC 회의 결과** 등이 정부 뿐 아니라 **의회에도 전달**된다면 **행정부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**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

○ **기업**들은 여전히 구조개혁의 **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**이며, 각국 **정부가 향후 더 많은 노력**을 기울어 줄 것을 부탁(BIAC)

○ 구조개혁은 **신흥국 경제성장**을 위해 **특히 중요**하지만,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**관리비용이 수반**됨을 염두에 둘 필요(멕시코)

○ **효과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**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성 뿐 아니라, **양질의 일자리와 적당한 임금을 보장**할 수 있도록 **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추진**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(TUAC)

□ 구조개혁 **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모형**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**필요성은 공감**하나, **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보완점** 등을 제시

○ **피로감을 유발하지 않고 개혁을 가속화**하기 위해서는 **정책 정보**를 정확히 **국민에게 전달**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러한 측면에서 **계량적 분석** 도구에 대해 **긍정적으로 평가**(포르투갈)

○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점은 좋으나, **지나치게 많은 가정**을 전제하고 있으며 **불확실성도 크다는 점**을 보완할 필요(독일)

○ **모형의 인과관계가 반대**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*을 염두에 두고 **각국의 의견을 취합해 모형을 발전**시킬 필요(의장)

* 투자 관련 세금 인센티브는 보통 투자가 낮을 때 도입되기 때문에 마치 인센티브가 투자를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

Round 5. Confronting the zombies: Insolvency reform, corporate restructuring and productivity growth (좀비기업: 파산제도 개혁, 구조조정과 생산성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□ 지난 20년간 **기업**의 **진입·퇴출 역동성**이 둔화되며 **생산성 저하**

○ 생산성 향상을 위해 **파산제도**(insolvency regime)와 **금융개혁**을 통한 좀비기업의 **퇴출, 구조조정**을 적극 유도할 필요

- 이는 **신규 기업의 진입 촉진** 및 **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** 향상 등 **포용적 효과(inclusiveness)도 기대**할 수 있음

□ **(좀비기업과 생산성) 자본배분 왜곡, 역동성 감소** 등은 시장 경쟁을 제한 → **좀비기업**이 **잔류**하며 **생산성 감소** 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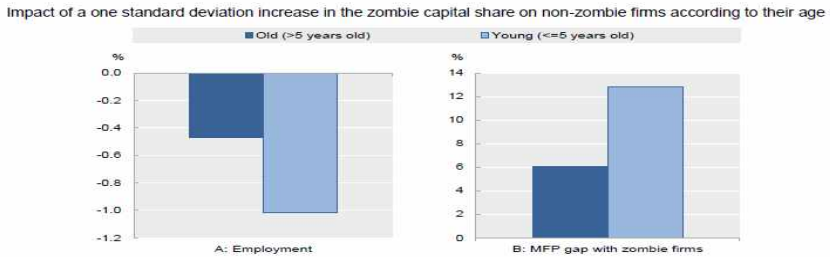
○ **금융위기 이후**, 많은 국가에서 **좀비기업 비중**이 **급증**

- 이는 **경기침체기**에 **생산성**이 **향상**되도록 **자원 재배치**가 일어난다는 **통상적인 시각과 배치**되는 결과임

○ **좀비기업 증가**는 건전 기업의 **고용*** 및 **대출가능액**을 **감소**시키는 등 **자원배분 왜곡**을 통해 **건전 기업 성장기회 제약**

* 좀비기업의 자본비중 15.6% 증가시, 신진기업(5년 미만) 고용은 1%이상 감소(Figure 3, A)

<u>좀비기업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(신생기업일수록 더 큰 영향)</u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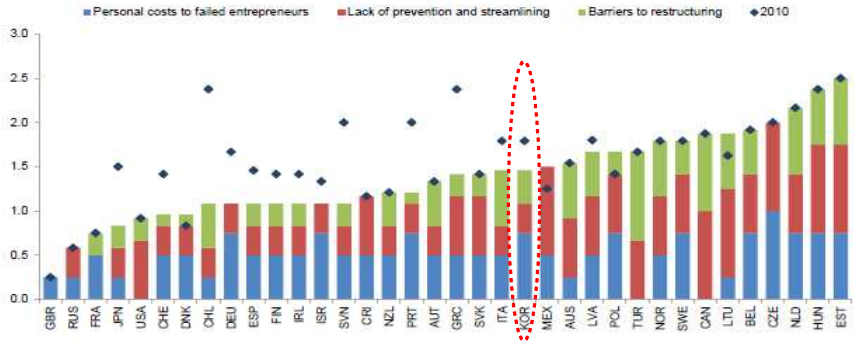
○ **좀비기업 비중**이 최소로 **감소**할 경우, **한국**은 **투자**(0.8%) 및 **다중요소생산성**(MFP, 0.4%) **증가**(Figure 5)

□ **(파산제도)** 새로운 OECD 파산제도 평가지표(Insol-13)는 국가별 파산제도 효율성을 평가, 좀비기업의 비중과 밀접한 관련

○ Insol-13은 ① 파산 기업가에 대한 대우, ② 예방과 효율화, ③ 기업구조조정, ④기타의 4개 부문으로 구성

- **한국**은 ①, ②, ③ 부문의 지표 적용시 **파산제도 효율성 22위**

국가별 파산제도 효율성(낮을수록 효율적)



○ 파산제도 개선시 **좀비기업 비중**은 **감소, 자본배치 효율성 증가**

□ **(금융부문) 금융부문의 왜곡**이 좀비기업의 잔류와 생산성 감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지식정보를 활용한 금융, 특히 **벤처캐피털(VC)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**가 기술 확산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

□ **(사회적비용)** 파산제도와 금융부문의 개혁은 **경제 역동성**을 **강화**하지만, 기업 퇴출로 인한 **실업자 발생**은 **사회적 불안요소**

○ **적극적 노동시장 정책(ALMP)** 및 **창업 활성화와 공공부문 효율화**가 전제되어야 할 것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**회원국**들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므로, 자본을 재분배하고 기업 내부의 생산성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

□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각국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

○ **은행의 건전성**을 강화함과 동시에 **좀비기업을 정리**해야하며, 좀비기업 청산에 따른 해고자 급증에 대비하여 보완적으로 **적극적 노동시장 정책**을 추진할 필요(아일랜드)

○ 좀비기업이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인지, 생산성이 떨어져서 좀비기업이 많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(네덜란드)

○ 좀비기업의 **정의**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(일본)

- 또한, 은행제도의 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꺼지면서 은행들이 불건전한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

○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도 좀비기업이 될 수 있기에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도 병행해야함(스위스)

□ **한국 대표단**은 중소기업(SMEs)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원구조(정부보조금, 공공조달)도 **좀비기업**을 온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

○ 이러한 문제는 '**포용적 성장**'을 강조하는 경우 더 심화될 수 있기에 ①목표를 명확히 하고, ②인센티브 체계를 재편하며, ③ 지대추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

Round 6. Jobs Strategy (Joint session with ELSAC) (새로운 고용 전략)

<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>

□ 새로운 OECD 고용전략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, 노동시장의 포용성(inclusiveness) 제고, 적응력과 회복력(resilience and adaptability) 강화를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방향으로 인식

① (**일자리 양과 질**)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높은 임금, 좋은 근무환경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

② (**포용적 노동시장**)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보장하고, 사회 이동성을 증진할 필요

③ (**적응력과 회복력**) 금융위기 같은 경제충격과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현

○ 또한 새로운 고용전략의 실행에 있어 서로 다른 정책 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OECD 기술전략, 혁신전략, 녹색성장 전략 등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

□ 핵심 정책권고는 **세 가지 원칙**에 바탕을 두고 있음.

① (**양질의 일자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)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유지할 정책 필요

② (**노동시장 배제 예방과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의 개인 보호**)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고 사후 구제 조치보다 예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함

③ (**경제 및 노동시장 급변동 관련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비**)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, 현재의

기술 정책, 사회 보장 및 노동시장 규제 등 전반적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

□ 위의 **세 가지 원칙**에 연계된 새로운 OECD 고용전략의 정책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음.

① 양질의 일자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○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

- 신생 기업의 진입, 가장 생산적인 기업으로의 노동력 재배분,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구조조정(또는 질서 있는 퇴출)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비즈니스 역동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장려

- 세제 효율성을 제고하고, 건전한 법률 및 사법 인프라를 제공하고,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,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

○ 기업이 경제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근로자가 일과 개인의 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

○ 일자리의 양과 질,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세를 사용

-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태에 따른 재정지원의 차별과 비임금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 표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, 특히 포괄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세의 누진성을 높여가야 함

○ 임금 설정 기관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공정하게 공유

- 단체교섭 시스템은 기업이 충격과 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포용적이어야 함

○ 노동 시장 필요에 비추어 적절한 기술 공급 보장

② 노동시장 배제 예방과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의 개인 보호

○ 사회 경제적 배경이 노동 시장에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 창출

○ 개인의 불이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생 예방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

○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적절한 실업 및 사회 보조 혜택을 결합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유인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 활성화 전략 개발 필요

○ 지역 불평등에 대처하면서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

- 노동시장과 주택정책이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면서, 노동시장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

③ 경제 및 노동시장 급변동 관련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비

○ 구조적인 이유로 이동한 노동자를 지원하며 재배치를 촉진

-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조와 재취업 지원, 예방 조치 및 조기 개입 조치를 함께 사용하여 적절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이 필요

○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비

- 미래를 계획하고, 가장 바람직한 직업의 미래에 대한 포용적 대화를 촉진하고, 현재의 노동시장 정책, 기술 정책 및 사회 정책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등 고용정책의 미래를 계획

< 주요 논의 내용 >

□ 경제구조적 변화, 디지털화,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심화되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**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**이 필요(의장)

<핵심 정책제안>

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
②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개인의 교육과 워크-라이프 밸런스를 강화
③ 노동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메가트렌드에 대비
ex)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시장 규제를 적절히 개선

□ 각국 **대표단**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**공감**하나,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**다양한 시각** 존재

○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가장 중요하며, 특히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(포르투갈)

○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**민간 영역**이기에, 민간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관련 정책은 매우 위험(BIAC)

○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에 고용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**인구 고령화** 등을 반영해야할 필요(일본)

○ **이동성**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중요하지만, **이민**의 경우 현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(핀란드)

○ 한 국가의 노동정책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**국가 간 정책 영향성**도 고려해야 해야 할 필요(벨기에)

□ **한국 대표단**은 새로운 고용창출 전략 수립 시 **사회적 대화**와 관련된 부분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

○ 또한, **젊은 세대**에 대한 **교육과 훈련**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3D 프린팅과 같은 **신산업**을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